

만성 재정적자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온 민간보육시설들이 시보육위원회나 시의원과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적은 규모로나마 간식비 등 시설지원비를 따내고 있어 곳곳에서 지원비 요구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육시설 지원문제는 그간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보사부의 지원지침이 마련되면서 부천, 안산, 인천, 군산 등지의 민간보육시설들이 시의 추경예산의 일부로 간식비, 시설운영비, 교재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안산의 경우는 93년 1월부터 탁아아동 1인당 간식비 3백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군산도 간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다. 이는 보육아동이 20명일 경우 한달 25일로 계산 매일 1인당 3백원씩 칠 경우 15만6천원이라는 작은 액수

민간보육시설들

시의회·시보육위 등과 간담회, 지원받아 안산·군산·인천 등, 간식비·교재비·시설운영비 따내

지만 시예산으로 민간탁아소를 지원한다는데 일단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시 민간보육탁아소연합회(민보련)는 보사부의 이런 지침이 내려지기 이전인 91년 10월부터 시의회청원팀을 구성, 시와 대화를 통해 92년에 민간탁아소 91개에 대한 1억원, 지원비를 통과시켰었다. 이 예산은 18개 민간탁아소의 시설운영비 2~3백만원과 전체 민간탁아소의 교재비 등 총 70만원씩이 포함된 것이며 보사부가 떠낸 보육프로그램 전집10권을 보급받기도 한 것. 올해 인천 민보련은 국공립탁아소와 함께 3

억8천6백만원의 지원비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천의 민간탁아소들은 지난 15일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을 놓고 대화, 간식비 등의 지원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것. 올해 탁아아동 1인당 3백원의 간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안산의 22개 민간탁아소 원장들 역시 지난 14일 시보육위원회와 대화의 자리를 갖고 추가지원 요구와 함께 보육아동수 보육시간 표준보육단가 등 법적 제한을 좀더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등 핵심현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탁아시설인 안산 진달래동산의 임남희 보육교사는 "당장 우리 요구대로 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일단 우리 민간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이해시켰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민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운영의 현실화를 꾀해주는 조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탁아시설의 대화물꼬가 트이면서 지원비 요구를 위한 활동을 준비 하는 곳이 많아

지고 있다는 게 민탁 관련자들의 얘기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예산을 따내고 있는 인천 민보련의 양은희 간사는 "3억이 넘는 액수는 큰 돈이지만 민탁에 대한 실제 지원항목에 제한이 많고 아동수가 많은 국공립이 지원액수의 큰 비중을 가져가기에 아쉬움이 크다"는 것.

이는 모법에 민간탁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매년 실질적인 지원을 따내기 위해선 지방의회 조례에 지원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 조례신설은 모법의 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실정에도 많은 민간탁아시설의 운영자들은 "일단 시의 협조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통해 민탁의 실제 사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에 의미를 찾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간담회를 작은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